

인공지능 시대 국가 기록관리의 새로운 미래 이끌 '제7기 국가기록위원회' 출범

- 기록관리·유산, 디지털·AI,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참여
- 3년간 국가기록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접목해 기록관리 체계 도약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국가 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기록관리 정책 수립과 표준 제·개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등 국가 기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기록관리의 디지털 전환 이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제7기 위원회는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위원장에는 한국현대사 분야의 권위자인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 및 유산, 디지털·인공지능(AI), 법·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3명과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 7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물론 기록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기록 활용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기록정책, 기록관리, 기록서비스, 대통령기록 4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촉직 위원을 전면 배치하여 본위원회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가기록은 정부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7기 위원회가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국가 기록관리의 혁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홍구 신임 위원장 역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막중하다”라며,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책임자	과 장	서왕장 (042-481-6247)
		담당자	연구관	이창영 (042-481-6253)



참 고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현황(20명)

연번	분야	이름	약력	비고
1	역사	한흥구	성공회대학교 한국현대사 석좌교수	위원장
2		이동헌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장	
3	기록관리 ·유산	양인호	한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4		이현경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5		윤은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6	디지털 ·AI	홍의택	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7		오효정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8		신신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데이터본부장	
9	법·행정	추교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		조일원	조일원 법률사무소 대표	
11		김이영	부산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12	문헌정보	장우권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3		김지현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4	당연직	곽건홍	국회기록원장	
15		전병호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장	
16		김규필	헌법재판소 자료조사과장	
17		김종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장	
18		이용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9		한성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	
20		김일수	경남기록원장	